

의료민영화의 실체를 말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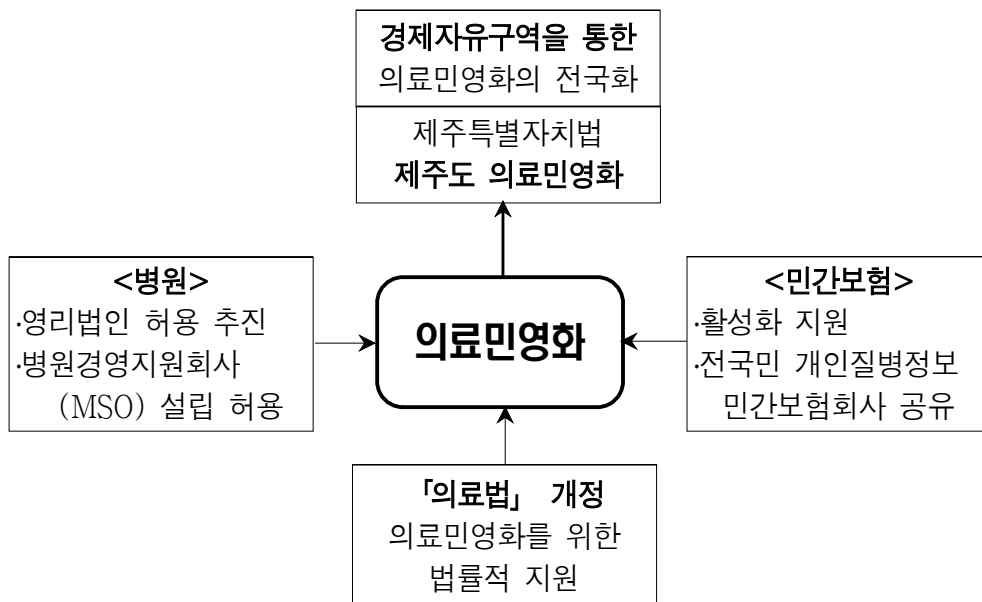
사)시민건강증진연구소

2008년 6월

- ▷ 정부가 도대체 뭘 안한다는거야?
- ▷ 의료민영화의 실체 1 : 의료민영화의 시험무대, 제주도
- ▷ 의료민영화의 실체 2 : 의료민영화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발판, 경제자유구역
- ▷ 의료민영화의 실체 3 : 이윤을 쫓는 자본의 출입을 허하라! 병원 영리법인 허용
- ▷ 의료민영화의 실체 4 : 병원경영지원회사, 영리법인 병원의 전단계로 자본침투 경로
- ▷ 의료민영화의 실체 5 : 국민건강보험을 고사시키고, 민간보험을 활성화한다
- ▷ 의료민영화의 실체 6 :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넘겨라?
- ▷ 의료민영화의 실체 7 : 「의료법」 개정안,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률적 지원
- ▷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시민행동을 제안합니다

▷ 정부가 도대체 뭘 안한다는거야?

- 정부가 지난 5월 20일, '건강보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'이며,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는 '괴담'에 불과하다고 했음. '심히 유감스럽게 생각'한다는 표현도 사용했음.
- 그러나 정부는 '의료민영화'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음. 오히려 제주도에서 의료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음.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비판하니 정부는 "건강보험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"고 동문서답만 되뇌이고 있음.
- 도대체 정부가 안한다는 건 뭐고, 또 하고 있는건 뭘지...
- 이 자료는 지금 현재 의료민영화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실체를 정리한 것임. 병원에서, 민간보험회사에서, 법률적인 차원에서,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하여 의료민영화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임.
- 이래도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안한다고 발뺌 할 수 있을까?



<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구성도>

- 의료민영화의 실체 1 -

의료민영화의 시험무대, 제주도

○ “제주도는 ‘의료개방·선진화의 테스트 베드’”

- 2008년 6월 3일 국무총리실에서 내놓은 자료에서 이와 같은 표현 사용
(※ 「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」, 국무총리실, 2008년 6월 3일, 3쪽)
- 한마디로 제주도 전체를 ‘의료민영화의 시험대’로 삼겠다는 뜻임.
- 그렇다면 제주도민 전체를 실험용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인가?

○ 제주도에서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일까?

- **의료민영화의 총집결판** : 의료민영화의 모든 정책을 시험해 보겠다는 뜻
- **전면적 의료시장 개방** : 제주도에 대하여 보건의료를 국내외 자본에게 전면 개방

| 제주도 의료민영화 추진 5대 악법 | 문제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□□ 외국병원 개설시, 복지부 장관 사전승인 폐지 | ○ 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장관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외국영리병원 설립 조건을 완화함. ○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사실상 경제부처에 이관 |
| □□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 | ○ 제주도에 외국병원 뿐만 아니라 국내병원에게도 영리병원 설립 허용 ○ 향후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확대 적용 가능성 큼. |
| □□ 영리병원 건강보험 적용 제한적 허용 검토 | ○ 사실상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검토 ○ 부분적으로 자율적 수가 결정 허용 검토 ※ 차기과제로 이월됨. 아직 최종확정된 것은 아님. |
| □□ 영리병원에 대하여 재무제표 제출 의무 생략 | ○ 영리병원 경영의 투명성과 정보공개 원칙 폐기 ○ 영리병원에 대하여 지나친 봐주기, 특혜 ○ 세금포탈로 악용될 가능성 큼. |
| □□ 외국의료기관 의약품 수입 허가 기준 개선 | ○ 의약품의 효과성, 안전성, 가격적절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의약품을 들여오도록 허용 ○ 제주도에 유통되는 약값을 올리고, 제주도 약값을 기준으로 전국적인 약값이 올라갈 우려가 있음. |

○ 제주도민들이 겪게 될 일들

- 병원의 양분화 : 영리법인 병원과 비영리 병원이 양분, 나는 어떤 병원을 가야하나?
-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 : 병원간 경쟁확대로 의료비 상승, 의료이용불평등 심화
- 민간보험 가입 부담 증가 : 건강보험 이외의 민간보험이 필수적인 분위기 형성

- 의료민영화의 실체 2 -

의료민영화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발판, 경제자유구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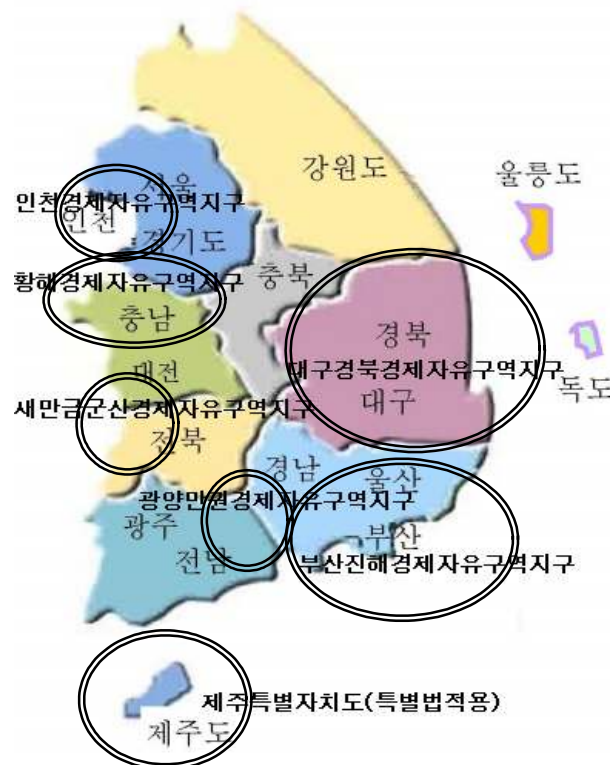
○ 경제자유구역에서는

- 의료관련 법률, 건강보험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의료민영화 추진 가능
-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서는 외국병원에 대하여 ‘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(23조의 1)’하며, ‘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병원도 허용(23조의 5)’하고 있음.
- 이에 대하여 국내병원들이 역차별이라고 반발하며, 국내병원들도 경제특구에 병원을 세울 경우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. 이에 따라 향후 국내병원에 대하여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.

○ 이를 활용하여 2MB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의료민영화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음. 기획재정부는 2012년까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 3개 이상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음.

○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6개, 제주도를 포함할 경우 7개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분포됨.

- 강원도와 충청북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분포.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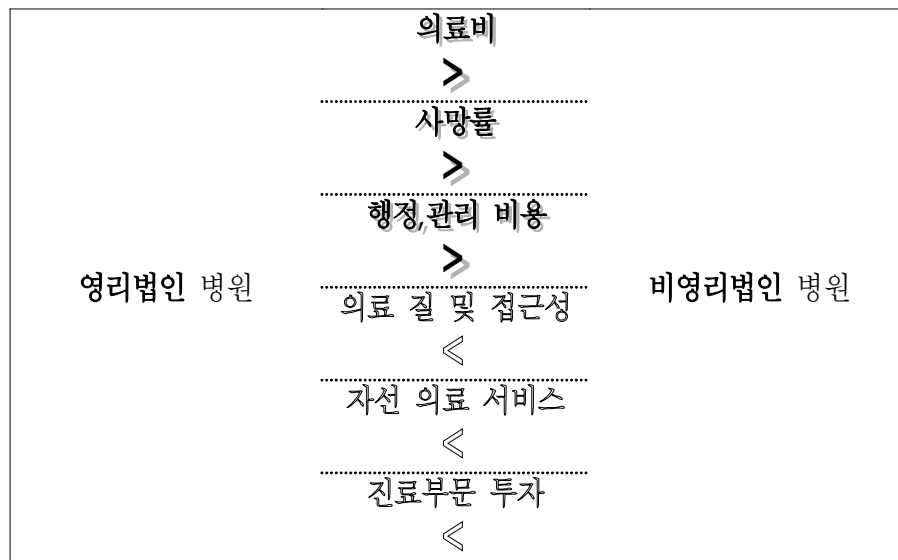
- 의료민영화의 실체 3 - 이윤을 쫓는 자본의 출입을 허(許)하라! '병원 영리법인 허용'

○ 지금까지 한국의 모든 병원은 비영리법인임. 영리법인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?

- ① 이윤을 쫓는 자본의 투자가 영리법인 병원에서는 가능
- ② 치료 위해 병원 내로 재투자 되어 왔던 수익을 영리법인에서는 투자자들에게 배당
- ③ 영리법인 병원은 '환자의 건강' 보다 '투자자의 이익'을 위해 운영되는 병원임.

○ 영리법인 병원 vs 비영리법인 병원 : 미국의 경험

- 미국의 로즈나우(Rosenau)는 1980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의 영리 및 비영리 병원의 성과를 비교한 연구논문 149편을 엄선하여 의료의 질, 접근성, 비용/효율성, 자선사업 등을 비교하였음.
- 비교 결과 88개 논문(59.1%)에서 비영리 병원이 우수하며, 18개 논문(12.1%)만이 영리병원이 더 우수하다고 결론
- 이런 논문들에 근거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.



(출처: 영리병원의 허용, 무엇이 문제인가? -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팀)

○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도입하려 하는가?

- 의료민영화를 통해 이윤을 쫓는 자본이 병원에 출입을 허용하여 돈벌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임. 이것이 이명박의 '의료서비스 선진화'의 핵심임.

- 의료민영화의 실체 4 - 병원경영지원회사(MSO), 영리법인 병원의 전단계로 자본침투 경로

○ 병원경영지원회사(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)란?

- 병원과 계약을 맺어 일정한 댓가를 받고 구매, 인력관리, 진료비 청구, 마케팅 등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.
- 현재 이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가 존재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음.



○ 이명박 정부에서는?

지난 4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1단계(Service-PROGRESS 1)에서 'MSO 설립'을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6월 10일 「의료법」 개정안을 내놓았음(※ 병원이 설립하는 MSO만 허용함).

○ MSO의 본질은 무엇인가?

(1) 병원과 민간자본의 고리 역할, 병원에 자본 침투 경로

김선욱 변호사(대외법률사무소)는 "... MSO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인 대세"가 될 것이며, "경영자문회사라는 개념적 역할 보다는 병원과 민간자본의 연결고리로 역할"이라고 전망했다. (인터넷전문지, 2008년 2월 28일자)

(2) 병원 영리화, 영리법인 병원을 위한 사전 포석

영리법인 설립이 불가능한 현 제도하에서 MSO 도입은 ... 사실상 병원 경영에 외부자본을 끌어들이 수 있는 길이 마련됨에 따라 수익성 병원사업 허용으로 볼 수 있다 (인터넷전문지, 2007년 4월 28일자)

(3) 자본의 관심이 집중, 대형보험회사도 눈독

송영진 이사(메디파트너)는 "이미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금융기관들은 병원경영지원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검토중입니다." ... (인터넷전문지, 2008년 2월 22일자)

남대식 대표(메디파트너 전 부회장)는 "민간보험사가 향후 5-10년내에 MSO를 사려는 현상이 일어날 것"이라고 전망하고 "현재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부자본과 의료자본의 결합이 현실화되고 의료산업화가 가장 극대화"(인터넷전문지, 2007년 3월 23일자)

- 의료민영화의 실체 5 - 국민건강보험을 고사시키고, 민간보험을 활성화한다

- 이명박 정부의 보험정책 방향 : 국민건강보험 고사, 민간보험 활성화
 -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민건강보험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음. 건강보험을 현재 수준에서 묶어두어 민간보험 시장을 보장하려 하고 있음.
 - 민간보험 활성화에 대하여 정부는 “의료분야 투자확대와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추진”에 대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음(기획재정부 「7%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」 세부실천계획」 (2008. 3. 10.) 의 29쪽).
-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에서 민간보험을 포함한 환자부담 의료비 비중이 41%나 되어 미국과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함.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국민건강보험을 더욱 확대하여 공공의료비 비중을 높이고 본인부담 비중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함. 이명박 정부는 반대로 하고 있음.

<표> OECD 국가들의 국민의료비 비중 (2005년)

| 구 분 | OECD 전체 | 한국 | 미국 | 스웨덴 | 일본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|----|-----|----|
| 공공의료비(%) | 73 | 53 | 45 | 85 | 82 |
| 본인부담 + 민간보험(%) | 25 | 41 | 50 | 15 | 18 |

※ 자료 : OECD Health Data 2007

-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안에서 민간보험 활성화 지원
 - (1)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게 제공 검토
 -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및 제안
 - (2) 민간의료보험 상품 출시에 대한 규제 완화 - 보험업법 개정
 - (3) 생명보험회사 상장, 보험지주회사 허용 등 자본시장에서 보험자본 지원
 - (4) 손해보험사가 주도해왔던 민간의료보험시장에 생명보험회사 진출
 -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출시

- 의료민영화의 실체 6 -

민간보험 활성화 위해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넘겨라?

- 건강보험공단은 전국민 질병정보를 비롯 의료이용, 처치 및 수술, 검사, 의약품 처방 정보 등을 가지고 있음
- 오래전부터 민간보험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넘겨 받고자 지속적으로 계획, 시도를 해 왔음

「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방향」 (2003, 삼성생명)

- 21쪽, 민영의료보험의 발전단계, 최종단계 -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보험
- 22쪽, 진료정보와 심사정보를 공보험과 민간보험이 상호공유
- 27쪽, 공보험 데이터 활용에 의한 다양한 의료관련 위험을 개발로 **활발한 상품개발**

- 현 정부는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넘겨주는 정책을 검토 중에 있음

「"7%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" 세부실천계획」 (2008.3.10. 기획재정부) 29쪽

- 의료분야 투자확대와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**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추진**
* 상품표준화, 공·사보험 정보공유 등 제도개선 추진

- 민간보험회사가 전국민 개인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?
 - 민간보험회사는 이윤추구가 목적
 - 현재도 민간보험회사가 알 수 있는 개인의 건강상태와 재력에 따라, 보험가입 요건과 대우가 다름
 - 만일 민간보험회사가 전 국민 개인정보를 알게 된다면, 전 국민을 분류하여 보험 가입에서 차별적 대우를 할 것임.
- ☞ 장애인, 희귀난치질환자, 과거 암을 앓았던 자, 비만인 자, 저체중자, 만성질환자 등은 보험가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임.
- ☞ 국민이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당신을 선택하는 것이 됨.

- 의료민영화의 실체 7 -

「의료법」 개정안,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률적 지원

◆ 문제점 1 : 병원의 영리적 활동 대폭 허용 - 영리목적 부대사업 전면 허용

- (1)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시행령으로 넘김으로써 부대사업의 범위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영리추구적 경향이 강화될 수 있음.
- (2) 정부가 허용하고자 하는 부대사업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MSO(병원지원경영회사)설립임.
- (3) 일각에서는 ‘영리병원 허용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’는 말도 나오고 있음.

◆ 문제점 2 : 외국 환자 유인·알선 행위 민간보험사에게도 허용

- (1)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국인에 대해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 관계를 맺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민영보험회사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상품을 팔고, 국내 의료기관과 각종 서비스에 대해 계약관계를 맺는 방식임.
- (2) 민간보험사에게 환자 유인·알선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은 보험사가 가입자에 대해 특정병원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사가 병원의 힘의 우위에 설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을 뜻함.
- (3) 이는 민영보험회사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소위 ‘미국식 의료제도’로 가는 직전 단계를 여는 것임.
- (4) 의료법 개정안에서 27조 제4항 2호의 문두에 ‘보험업법상 보험사를 제외한 자’로 변경해야 함.

◆ 문제점 3 :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- 대형병원 중심의 병원질서 재편

- (1) 병원 M&A 전면허용은 지금까지의 영리법인 허용의 확대과정을 고려할 때 대자본이 의료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.
- (2) 불법 과산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는 임의 폐쇄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임.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 법의 제정은 영리화를 가속화하고, 대형병원 중심으로 병원질서를 재편할 뿐임.

▷ 의료민영화 저지 시민행동을 제안합니다

- 1) 영화 '식코(Sicko)'를 주변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합시다.
 - '식코'보기 운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.
- 2) 의료민영화의 실체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합시다.
 - 의료민영화를 설명한 여러 자료와 기사를 찾아 돌려 봅시다.
- 3)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분명히 정리합시다.
 - ① 제주도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의료민영화 반대
 - ②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반대, MSO 반대
 - ③ 민간보험 규제 법률 제정하라
 - ④ 국민건강보험을 확대하라
- 4) 의료민영화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 봅시다.

“죽어도 아프지 마라, 아프면 죽는다”
- 5)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촛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.

※ 우리 연구소에서는 의료민영화의 실체에 대하여 강연이나 간담회 등 직접 설명해 드립니다. 전화(02-2269-1905)나 이메일(phprc@phprc.re.kr)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


(100-855)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86-28 우리함께빌딩 503호

<http://phprc.re.kr>, phprc@phprc.re.kr

☎ 02-2269-1905, Fax : 02-2269-1908

